

# 광주 서구, 법규 무시하고 혈세 '핑핑'

### 재정투자심사 대상 불구 심사 안받고 예산 편성 서구 "추경 5380만원 편성...10월 심사받으면 돼"

광주 서구가 관련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수억원을 들인 전시성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이보다 적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총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주민과 청소년 1518명으로 구성된 연주단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구는 서구민 대합주를 2020년 5월 16일 오후 5시 서구청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개월간 행사

를 준비할 예정이다.

참여인원은 1518명으로 합주단 518명, 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연주한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자료조사 및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7월25일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총 사업비를 2억8157만원으로 편성했다. 강사로 998만원, 참여자보상금 4485만원, 행사비 970만원, 장비구입비 1910만원, 부대공연 1050만원, 무대설치 1972만원, 차량 인차 2676만원, 동계배정 2520만원 등이다.

구는 지난 20일 열린 2차 추경에

서 5380만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현재는 일부 금액이 삭감되면서 4000여만원의 예산이 서구의 회 기획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재정투자심사는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는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중 시군 및 자치구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할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구는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이번 추경에는 5380만원의 예산만 편성한 만큼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본예산에 2억2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10월에 열리는 정기 재정투자심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투자심사의 경우 총 사업비를 기초로 실시한다"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예산 추경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게 될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재판 본격화

공무원 승진과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58)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다.

24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금품 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0월16일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200만원, 광주환경공단 발주 사업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환경관련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5일 서 구청장이 공

무원 승진에 개입하고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조모씨의 자수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7월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조모씨(50)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서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 구청장은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알선 명목 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슈 판결

## 대법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 이의신청 없었다면 국유화 정당"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명의로 돼 있던 토지에 이의신청을 위 한 사유재산 증명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으로 추정되더라도 해방 뒤 국유화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씨(6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토지 152평을 갖고 있던 최모씨는 1942년 죽원의경(竹原義暉)이란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해방 뒤 이 토지는 1993년 국유재산법상 무주(주인없음)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년 4월 국유화됐다.

1944년 아버지가 이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을 물려받은 박씨는 국가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아버지가 최씨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했고, 1994년 1월부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은·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와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죽원의경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인지 여부와 국가가 해당 토지를 과실없이 점유했는지 여부 두 가지였다.

1심은 "죽원의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 죽원의경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해당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국가가 일본인 명의(창씨개명) 재산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타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이의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박씨 아버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죽원의경이 한국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오해 잘못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해병대의 대민 지원 작업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24일 오전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 지역인 포항시 남구 오천을 문충 2리에서 강풍에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존폐기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작된 광주 동구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이 매출 저조 등을 이유로 개장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2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공식 개장한 남광주야시장 운영이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남광주야시장은 감소하는 방문객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광주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운영돼왔다.

개장 당시 매대상인 30개팀, 푸드트럭 10대로 시작했고, 개장 초기 1일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매대상인 8개팀, 푸드트럭 2대 등으로 참여가 줄어들었다. 방문객도 지난해 기준 1일 1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매일 200여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매대상인과 남광주시장 상

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구와 남광주시장상인회는 지난 5월10일부터 금요일에 열리는 야시장 운영을 중단해오다 결국 전면 휴장을 하게 됐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남광주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있어 발전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매출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 상인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매대 참여자들이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10대들 자해·자살 시도 5년간 73% 증가

10대들의 자해·자살 시도가 최근 5년간 73%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당 원내총무(전북 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해·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센터급 이상 150여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자해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는 총 14만1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2만8082명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40대 2만7759명(19.7%), 30대 2만5185명(17.8%), 50대 2만1510명(15.2%) 순이다.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 10대가 2014년 2393명에서 2018년 4141명으로 73%가 증가했다. 이어 20대 63.1%, 80대 이상 56.8% 순이다.

연도별 내원건수는 2014년 2만5573명, 2015년 2만6728명, 2016년 2만7074명, 2017년 2만8278명, 2018년 3만3451명으로 5년간 30.8% 증가했다.

이 중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입원 후 사망한 환자는 2014년 2175명, 2015년 2045명, 2016년 1881명, 2017년 1761명, 2018년 2090명으로 총 9952명에 달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